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iachoi@kiep.go.kr
-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sikwak@kiep.go.kr
-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m@kiep.go.kr
- 박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kim@kiep.go.kr
-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elee@asaninst.org
- 조원득**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wodcho18@mofa.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부록

주요 내용

- ▶ 미국 인태 전략과의 연계는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협력대상국의 입장과 니즈를 반영해 협력을 추진할 필요
 -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 반대하며 ‘포용적·개발지향적’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 만큼, 신남방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 협력보다는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 신남방국가들의 협력수요를 반영하면서 한·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국에 제안할 필요
 - [경제협력] 국별 협력수요와 한·미 경쟁력을 고려해 중점 협력국 및 세부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한·미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구체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
 - △ [디지털] ICT 인프라 협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제도 수립·정책 개선 △ [에너지] 신남방국가의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 [인프라]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전력 설비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 [비전통안보] 한·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를 통해 한·미가 아세안에 기추진하고 있는 협력 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
 - △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 수립·평가 시스템 구축 및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 [보건]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 [재해·재난] 재해·재난 예·경보 시스템 및 아세안 국가들의 구조·구난 대응·역량 강화 △ [해양] 해양사고 구조·구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 신남방정책의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P(People·Prosperity·Peace) 각 분야별 요소 및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산업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우선시할 필요
 - 스마트시티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재해·재난 예방, 보건 등 3P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메콩 협력 또한 한·미가 소다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로, 미국의 ‘Mekong-U.S. Partnership’과 한국의 대메콩 7대 중점 협력 과제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과의 관계 설정에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한·미 양국은 2019년 11월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설명서(Fact Sheet)'를 통해 경제협력, 거버넌스, 인적자원개발, 비전통안보 중심의 평화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
- 인태 전략과의 연계는 아세안·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태 전략의 대중국 견제 성격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신남방정책의 협력대상국인 아세안이 중국을 겨냥한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대상국의 입장과 니즈를 고려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 본 연구는 미국 인태 전략의 주요 협력 분야,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신남방지역 협력대상국들의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대미협력 환경 분석을 통해 인태 전략에 대한 이들 국가의 입장과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미 협력 유망 분야와 관련해 신남방 주요국이 어떠한 협력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미국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

- [배경]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 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태 전략을 추진
 - 미·중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engagement) 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을 유도하려 했으나, 중국이 기존 질서에 대항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나감에 따라 미국 내에서 중국

에 대한 관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고 인태 전략을 통해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BRI(Belt and Road Initiative)를 견제하려 했음.

● [내용]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은 군사·안보, 경제, 거버넌스를 3대 축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 [군사·안보] 기존의 태평양사령부(PACOM)를 인태사령부(INDOPACOM)로 개명하고 미·일·호·인도 4자 안보협력(Quad)을 추진하는 한편,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고 동·서남아 중소국의 국방역량 강화를 지원
- [경제협력] 인태 지역에 대한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촉진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안보 개선 △에너지 안보 및 접근성 강화를 모색
 - [인프라] 기존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국제개발처(USAID)의 민간개발금융 기능을 통합·확대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를 신설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연 290억 달러에서 연 600억 달러로 증액
 - [디지털]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 연계성 및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DCCP: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 security Partnership)과 미·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CP: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등을 추진
 - [에너지] '에너지를 통한 아시아의 발전과 성장 프로그램(Asia EDGE)'을 출범시키고, 인태 지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시장 촉진 모색
- [거버넌스] 인도태평양 투명성 이니셔티브(IPTI: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를 통해 인태 지역의 반부패 및 재정투명성 제고 및 민주주의 촉진

2)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①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바라면서도, 중국을 의식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

-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역내 관여 축소가 인태 지역의 전략적 공백을 야기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는 인태 전략을 지지하지는 않음.

● [외교·안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인태 전략과의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협력 수준과 범위는 중국 위협 인식도에 따라 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준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인태 전략에 협력할 전망
 - [베트남]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미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자국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배제함.
 - [싱가포르]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 정책이 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역내 힘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정치 상황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만큼, 동맹 관계는 유지하되 인태 전략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태국]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 회복을 모색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친중 행보를 보이며 미·필 상호방위협정(VFA) 파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필리핀 외교·군부 인사들의 친미 성향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 해양역량 강화에 대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는 인태 전략이 자국 외교의 독립성과 아세안 중심성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나, 자국 국방역량강화를 위해 미국과 선택적 국방·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말레이시아] 표면적으로는 중립 노선을 표방하나 친중에 가까우며,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대응에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해양안보이니셔티브(MSI)에는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나, 미얀마의 정치 상황으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캄·라·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들로 반(反)중국 성격의 인태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브루나이 또한 중국을 의식해 미국과의 협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협력] 경제성장이 필요한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인태 전략이 제공하는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인태 전략이 BRI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아세안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성장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임.

- 2020년 싱가포르 씽크탱크 ISEAS-Yusuf Ishak이 아세안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1.9%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70.2%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답함.¹⁾
- 그러나 인태 전략의 경제이니셔티브는 BRI와 비교해 아세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인태 전략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태 전략 경제 이니셔티브 전체를 선도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으며, 이를 지원할 수단도 부족
 - BRI에 대해 민간주도의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BRI와 비교해 인태 전략 경제 이니셔티브의 규모가 작으며, 그 실행 속도 또한 느림.
 -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은 수조 달러가 필요한 데 비해 인태 전략이 제시하거나 지원하는 규모는 수억 달러에 불과하며, 중국의 BRI에 비해서 그 규모나 업무 추진 속도가 경쟁이 되지 않음.
- 인태 전략이 투명성, 표준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를 강조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 개발 추진에 있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태 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 기술 및 발전, 인적 자원 개발, 역량 강화 등)와 중점 협력분야인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는 아세안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만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전략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국과의 관계, 국별 정치 상황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태 전략의 경제 이니셔티브 활용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일 전망
 - [베트남] 인태 경제 이니셔티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국가로서, 미국과의 교역 확대와 에너지 협력을 희망하며 인태 경제 이니셔티브가 대중 의존도 완화에 기여하길 바람.
 - [싱가포르] 인태 전략을 통해 사이버안보, 인프라 투자, 아태 지역 내 관련 법·규제 개선 및 투명하고 경쟁적인 조달 프로세스 도입에 대한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 [태국] Mekong-US Partnership을 통한 역내 경제권 개발과 디지털 협력 추진을 희망
 - [인도네시아] 자국 인프라 개발을 BRI와 적극 연계하고는 있으나, 미·중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력·도로·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중국을 의식해 적극적 협력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인태 전략을 통해 인프라와 디지털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중국의 대필리핀 투자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고

1) Tang, Siew Mun et al. (2020)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0 Survey Report," ISEAS Yusof-Institute, p. 16.

려할 것으로 보이며, ICT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LNG 산업 육성, 도로·전력 등의 인프라 협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미안파] 인프라 개발 및 기술·역량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희망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로 미국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지 않음.
- [캄·라·브] 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세안 차원의 대응]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6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문서를 공식 채택하고,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

- AOIP는 인태 지역을 강대국 '모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EAS, ARF, ADMM+ 등 아세안 다자협력체제를 통해 인태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
 - 중국이 상기 협력체의 참여국임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 중국을 배제하는 인태 지역 협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AOIP는 해양협력,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및 기타 협력 등 아세안이 주도할 지역협력의 4대 분야를 제시하며, 안보·전략적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에 대응해 탈정치적(depolicitized) 협력을 제안
 - 해양협력 부분에서 '항행의 자유',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등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원칙 일부가 짧게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AOIP가 제시한 4대 협력 분야의 대부분이 안보·전략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역내 번영을 위해 당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개발 과제들임.
 - 이는 아세안이 경제 및 기능적 협력에 초점을 둔 상호보완적 협력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인태 전략의 '전략적' 성격을 상쇄하려 한 것으로 분석됨.

② 인도의 입장과 대응

● 아세안과 달리 인도는 미국 인태 전략의 주요 역할자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외교·안보] 비동맹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부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양자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쿼드 참여국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이나 쿼드 협력도 지속하고 있음.
 - 인도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2011년 미국과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음.
 - 양국은 2018년 9월 '통신 호환성 및 보완협정(COMCASA)'을, 2020년 10월에는 '군사지리정보 공유협정(BECA)'을 체결하였는데, 최근 인도가 미국과 맺은 국방협정들은 군사동맹국들 간에

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협정들임.

- 비동맹 원칙을 고수하는 인도는 쿼드 협력에 소극적이었으나 2020년 6월 발생한 인·중 국경유혈사태로 쿼드 국가들과의 양자·소다자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협력] 미국과 인도는 교역·투자 부분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2020년 6월 발생한 국경유혈사태로 인도·중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2019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1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투자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국경유혈사태 이후 인도는 중국기업에 대한 5G 배제,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사용금지, 공공조달 시 육로 접경국가 참여 제한 등 대중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전망
 - 특히 미국이 인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3대 분야에 대한 대인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양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인도는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인도는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인도가 대중 봉쇄전략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인도는 인태 지역에서 공세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관리하고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미국 주도의 배타적 안보 그룹화에 편승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음.
- 모디 총리는 2018년 6월 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free, open, inclusive)'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도가 추구하는 지역 협력은 포용성, 상생 번영 및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특정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것임을 밝힘.
 - 여기서 특정국은 중국을 의미하며, 인도의 이러한 입장은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을 수용하면서 가지는 딜레마를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됨.
- 그러나 중국과의 국경유혈충돌 사태로 인해 인도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 1.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구분		외교안보	구분	경제협력	
신중하지만 적극적 협력 추진	인도	미·인 양자 협력 및 쿼드 협력을 통해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견제	적극적 활용 국가	인도	BRI 견제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 및 미국과의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싱가포르	역내 균형 및 안전한 SLOC 확보를 위해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 지원		싱가포르	사이버 안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역내 법·규제 제도 개선, 투명하고 경쟁적인 조달 프로세스 도입 등의 협력 희망
	베트남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행보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베트남	인태 전략이 BRI 견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에 기여 해주길 바라며, 미국과의 FTA 체결, 교역 확대, 에너지 협력 등을 희망
소극적 협력 추진	필리핀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수준의 동맹 관계 및 안보협력은 유지할 전망	소극적 활용 국가	태국	미국의 하루메콩이니셔티브(LMI)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희망
	태국			인도네시아	BRI와 인태 전략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리를 추구할 전망
	인도네시아	중립노선과 실리외교를 지향하며 미국과는 자국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추진	말레이시아	전력·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미국의 협력 기대	
	말레이시아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나 친중 노선에 가까우며,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추진	필리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 제기	
협력이 미미한 국가	브루나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소극적	소극적 활용 국가	미얀마	BRI 참여 속 미국과의 협력 확대, 특히 개발협력,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등의 협력 확대 희망
	미얀마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긴 하나, 인권 문제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		캄보디아	자국의 경제성장 및 대중국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마다하지는 않을 상황
	캄보디아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라오스	
	라오스			브루나이	

자료: 저자 작성.

③ 시사점

- 아세안과 인도 모두 '포용적'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 협력보다는 경제협력 및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서 제시한 중점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3)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 수요 분석

① 경제협력 수요 분석

-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과 함께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 및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 발전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주요국의 각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 점수를 도출²⁾

표 2. 신남방 주요국의 3대 분야별 한·미 우선 협력 가능 부문

국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인도네시아	ICT 인프라 디지털 활용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성 규제	해운 도로 수자원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ICT 시장 규모·혁신력	재생에너지 규제 1인당 에너지수요 에너지효율성 규제	도로
미얀마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정책·제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성 규제 전기접근성	전력 해운 항공
필리핀	ICT 인프라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적자원·기술 숙련도	석유화학 산업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수요	도로
태국	ICT 인프라 디지털 활용도 정책·제도	재생에너지 규제 신재생에너지 산업 1인당 에너지수요	해운 수자원
베트남	ICT 시장규모·혁신력 디지털 인적자원·기술 숙련도	석유화학 산업 1인당 에너지수요	항공 도로
인도	ICT 인프라 디지털 인적자원·기술 숙련도 디지털 활용도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접근성 1인당 에너지수요 에너지효율성 규제	전력 수자원

주: 해당국의 협력수요가 높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도 높은 분야.
자료: 저자 작성.

2) 구체적인 방법론은 최인아 외(202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pp. 206~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② 비전통안보 협력수요 분석

- △환경 △재해·재난 △보건 △해양 협력의 4대 협력 분야 중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

표 3. 아세안 비전통안보 분야의 주요 협력 이슈와 수요

주요 이슈		협력수요
환경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감축, 적응, 기술 이전 등)
	생물다양성	생태계 복원 역량 제고 (관련 제도 강화 및 기술 및 지식 협력)
	연무	산불방지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재난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예방 관리 시스템 강화 • 위험 및 취약성 평가 역량 강화 • 정보·데이터 이용 가능성 개선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 강화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 구조구난 시스템 강화
보건	보건 인프라 확충	위생 접근성 향상 보건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전염 및 신종 감염병	전염병 및 신종 감염성 질병 예방 및 통제
해양	해양 안전	해적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 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
	해양 쓰레기	해양쓰레기 경감 역량 강화

주: 협력수요는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CN) 2015-2025」,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 작업프로그램(2016-2020)」 등을 참고.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①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기본 협력 방향

-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은 '신남방국가와의 협력 확대'라는 신남방정책 고유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인태 전략과 접점이 닿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세안은 역내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이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상을 준다면 아세안의 전략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을 시작하는 시점에 양 정책 간 협력을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해 협력을 추진할 필요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신남방정책의 3P(People · Prosperity · Peace)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르는 동시에 협력의 상류와 하류를 잇는 협력과제 발굴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넘어 구체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논의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이 현재 일본·호주·인도 등 주요 협력국과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들을 분석·참고하여 기존 이니셔티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

② 경제 협력 기회 및 협력 방향

● [중점 협력국]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력대상국 선정 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신남방정책의 중점 협력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개발·협력 수요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표 4. 신남방국가별 주요 협력 환경평가

국가	인구 (백만 명, 2019년)	GDP (십억 달러, 2019년)	분야별 정책 추진력 (정책+능력) ¹⁾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와 잠재력 ²⁾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브루나이	0.5	13.5	강	강	중	○	○	○
캄보디아	16.0	27.1	약	약	중	○	○	○
인도네시아	268.1	1,119.2	중	중	중	∞	∞	∞
라오스	6.9	18.1 ³⁾	약	중	약	○	○	○
말레이시아	32.6	364.7	강	강	강	◎	◎	◎
미얀마	54.3	69.3	중	약	중	◎	◎	∞
필리핀	107.3	376.8	중	중	중	◎	∞	∞
싱가포르	5.7	372.1	강	강	강	◎	○	○
태국	69.3	543.7	강	강	강	◎	◎	◎
베트남	96.5	261.9	중	강	중	∞	∞	∞
인도	1,342.6	2,888.3	강	중	강	∞	∞	∞

주: 1) 정책의 적절성과 추진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임.

2) ∞은 매우 큼(혹은 많음), ◎은 큼, ○은 다소 있음, ○은 작거나 미미함을 의미하며, 상대적 평가임.

3) 2018년 기준.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0 51th Edition," p. 78, p. 101; 최인아 외(2020), 제4장 제1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디지털] 한·미 협력이 가장 유망한 분야는 ICT 인프라로 전망되며, 양국이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ICT 인프라는 한·미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인도의 협력수요가 특히 높은 만큼, 한·미 협력 추진 시 이들 국가의 ICT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앞세워 신남방지역에 중국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는바, 향후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는 신남방국가들의 디지털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디지털 제도 수립·정책 개선의 경우 태국과 미얀마의 협력수요가 높으며, 필리핀, 베트남, 인도도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기술숙련도 부문의 협력수요가 높음.
 - 따라서 상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설 전문가 포럼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한·미 디지털 표준에 익숙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고려
 - 일본의 경우 '미·일 전략적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JUSDEP)'을 맺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워킹 그룹, 디지털 인프라 개발, 사이버 안보 관련 워크숍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유사한 파트너십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에너지]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인도 등 에너지 효율성 규제에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미 모두 '그린 뉴딜' 정책 차원에서 신남방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음.
 - 신남방국가들이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 거래에 있어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제안해 신남방지역의 참여를 유도
 - 특히 재생에너지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인프라] 한·미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유망 협력 분야로 고려해볼 수 있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인프라사업 및 지원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사업자문기구(TAF) 등과 우리나라 관련 부처 간의 정례 협의를 개최해 구체 사업 발

굴을 논의할 필요

- [도로] 도로사업은 개발도상국이 상위 발전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발전의 근간인 만큼 도로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를 통해 신남방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
 - 도로 협력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으며, 협력대상국의 도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미가 인공위성을 활용해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에 공동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자원] 한국은 그간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협력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미국도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를 추진하며 메콩지역의 수자원 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수자원은 한·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힘.
 - 미국은 경성(물리적)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기보다는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 등 연성(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성 인프라 건설 경험과 미국 연성 인프라 간 시너지를 모색할 필요
 - 일례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관심사인 메콩 지역의 상수도 및 배수시설, 더 나아가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건설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력 인프라] 신남방지역의 전력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증가가 필요한 바, 한·미가 경쟁력을 보인 인도와 미얀마에 대한 전력 설비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한국과 미국이 함께 전력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한국과 미국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전력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양국이 제공

③ 비전통안보 협력 기회 및 협력 방향

- [기본 방향]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할 필요
 - 한·미 간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협력부터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
 - 비전통안보 협력 이슈 중 ODA가 활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를 설치해 유망 협력 분야 및 구체적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함.
 - 또한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미 상호협력기금'을 만들어 아세안의 비전통 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환경] 양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메콩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와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은 한·미 간 협력을 시작하기 가장 쉬운 분야로 꼽힘.
 - 기후변화 관련 양자 협력기금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정책 대화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아세

- 안 차원, 혹은 국별로 협력 가능한 세부 분야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지원
- 기후변화와 관련해 아세안의 특수 수요가 있는 분야로는 연무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아세안이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상대국으로부터의 자원 조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가 아세안 연무 관리를 위한 자원 마련을 지원할 필요
- 한·미 모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협력을 진행해온 만큼, 'Mekong-U.S. Partnership (舊 LMI)'과 연계해 메콩 유역의 보호지역 관리, 종자 보존, 외래종 침입 예방 및 사후 대응, 수질 관리,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

● [재해·재난] 위성정보를 활용해 홍수 등 자연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아세안 지역의 구조·구난 대응·역량 강화 협력을 추진할 필요

- 한·미가 이미 위성 기반의 수자원 데이터 협력을 추진 중인 만큼, 위성을 활용해 메콩강 지역의 홍수 예·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필요
 - 또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에 관해 한·미가 기상위성을 동원해 수집된 정보를 아세안특수기상센터(ASCM) 등과 공유하는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한·미·아세안 관련 기관 간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도상훈련 실시를 통해 아세안 긴급대응팀의 능력 배양에 기여
 - 기존 민간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군 사이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하의 '재난 관리 및 인도적 지원 센터(CFE-DM)'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

● [보건]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신종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

-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에 대해 우선적 지원을 고려하고,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라도 아세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아세안의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할 필요
 - 코로나19 대응 능력 노하우 및 감염병 예방·탐지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포럼 개최 및 아세안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을 고려

● [해양협력]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소형무기·마약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재난 발생 시 구조·구난 작전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기술·역량·장비 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의 구조·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 미국은 오래전부터 동남아해양안보이니셔티브(MSI)를 통해 동남아 해양국가들의 해양방어능력 강화에 기여해온바, 미국과의 협력하에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경비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
 -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역량강화는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 차

원에서 미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인 만큼,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의 협력에 있어 보다 주목해야 할 분야임.

- 단 한국의 협력은 남중국해 문제와는 별개로 초국가적 범죄, IUU 어업 등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역량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④ 주요 정책 과제

- [인도와의 협력 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그간 아세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했던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한·미 협력과제 발굴이 필요

- △ICT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회랑·스마트시티 개발 △에너지 효율성 개선·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을 추진
- 인도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벙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메콩-강가 협력(MGC)하에 진행되는 운송·통신 인프라, 에너지, 재해·재난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고려
 - 단 인도·아세안 연계성 프로그램 지원은 일본이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한국이 한·미·인도 3각 협력을 새롭게 추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인도가 매력적으로 느낄 차별화된 전략과 사업을 제시할 필요

-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디지털은 에너지, 인프라와 비교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디지털 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추동할 주요 분야이며, 미국 또한 신남방지역에 대한 자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고 및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 신남방국가에 대한 ‘한·미 디지털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디지털 협력에 대한 양자간 정례 협의체 설치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연구반 설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협력사업 △전자정부 등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연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스마트시티는 교통혼잡, 폐기물 처리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프라, 에너지, 비전통안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사업으로 협력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임.

-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의 집약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 및 산업 클러스터 건설과 연계되어 그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치안, 재난·재해

- 대응,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등 3P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임.
- 아세안은 급속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발족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적극 모색 중임.
- 아세안의 경우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중점 협력사업이 상이한 만큼, 한·미 협력 추진 시 국별 경제 수준 및 발전 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

●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한·미 모두 이미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콩 협력은 한·미가 소다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힘.

- 한국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7대 분야에 대한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려 하며, 미국도 기존의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를 'Mekong-U.S. Partnership'으로 격상하였음.
- 메콩 지역은 수송, 경제회랑, 에너지 등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촉진, 제도 개선, 역량 강화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망라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좋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전통안보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어 협력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의 경우 하드 인프라에 강점이 있고 미국의 대메콩 협력 프로그램들이 소프트 인프라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한·미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

●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비전통안보 이슈는 경제협력과 함께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생길 수 있는 전략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 분야이며, 3P의 전 분야의 이슈를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간의 신남방정책은 3P를 표방하면서도 아세안의 핵심적 이해인 비전통안보 협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향후 신남방정책은 비전통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비전통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협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KIEP**

부록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안)

경제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협력환경 및 분야별 개발수요를 고려한 중점 협력대상국 선정 - 최우선 협력대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중점 협력대상국: 필리핀(에너지, 인프라), 미얀마(인프라)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인프라 업그레이드 협력 강화 - 중점 협력대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추진 -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 컨설팅(중점 협력대상국: 태국, 미얀마) - 현지 디지털 전문가 육성을 위한 상설 전문가포럼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연수 실시(중점 협력대상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안보센터(ASCCE) 공동 지원 - ASCCE 프로그램 공동 지원 및 아세안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 연수 프로그램 실시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 이니셔티브 추진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신남방지역의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중점 협력대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인도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건설링 제공 - 중점 협력대상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경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관련 부처와 미국 DFC, ITAN, TAF 등 관련 기관과의 정례 협의 추진 - 신남방 각국의 인프라 지원 정책, 건설역량, 규제 관련 제도 등을 고려한 유망 협력 분야 및 구체 사업 발굴 • [도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도개발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추진 - 인공위성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와 도로 규모 측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중점 협력대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 [수자원] 메콩 지역의 수자원 인프라 확충 - 미국의 연성 인프라와 한국의 경성 인프라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 모색 - 한·메콩물관리공동연구센터와 미국 LMI 간 협력사업 확대 - 상수도, 배수시설,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공동 건설사업 추진 • [전력] 한·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 - 전력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및 제도적 지원(원스톱 서비스)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중점 협력대상국: 인도, 미얀마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으면서 한미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 주무부처간 정책 대화 활성화(예시: KOICA-USAID 간 정례협의회 설치) -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미 상호협력기금' 설치
비전통 안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협력기금 설립 - 아세안과의 정책 대화 및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 아세안 연우관리 협력 로드맵에 대한 각 단계별 자원 지원(아세안 연우 해소 협력 공동기금 설치 등) •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 - 보호지역 관리, 외래종 침입 예방 및 사후 대응, 수질관리, 종자 보존, 생태계 복원사업 공동 지원

계속

비전통 안보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콩 지역의 가뭄·홍수 예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정보를 활용한 홍수와 가뭄 관련 예보 및 경보 제공 -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제방·호안 등) • 아세안 자연재해 경보 및 예보 시스템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기상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SCM과 공유 • 아세안 긴급 구조·구난 지원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아세안 관련 기관 간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한국군과 미국 인태 사령부와의 협력 모색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진단 키트, 방역 물품, 백신 공여 및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의 역량강화 지원 -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 전문가 포럼 및 아세안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에서의 구조구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사고 대처역량 강화 지원 • 초국가적 범죄, IUU 어업 등에 대한 해양법 집행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경비정 공여 - ICT를 활용한 초국가적 범죄 관련 정보 공유

자료: 저자 작성.